

2018년 북한 시장 동향과 2019년 전망

김석진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kimsj@kinu.or.kr

I. 머리말

최근의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와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일반 주민 중에는 시장과 사경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국영경제도 시장활동에 상당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재 속에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광산물 수출을 비롯한 외화벌이의 주요 부분은 국영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는 일차적으로 국영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영기업들이 시장 거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므로 시장과 사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수입 물자가 시장과 사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입이 줄어들면 시장과 사경제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대북제재로 인해 국영경제의 소득과 생산이 줄어들면 국영경제 참가자 중 일부가 사경제 부문으로 이동해 시장과 사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시장과 사경제가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외화수입은 크게 줄었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사용해 상당한 수준의 상품수입을 계속하고 있어 내부 경제가 입은 피해는 아직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¹⁾ 자료와 정보가 부족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태를 알기 어렵지만, 대북제재 이후에도 시장과

1) 김석진, 「북한경제: 제재 영향과 발전전략」, 통일연구원 편,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2018, pp.47-56.

사경제 활동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18년 하반기에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으나,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에 대한 예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I. 시장 및 사경제 동향

1. 소비재 시장과 생활수준

지난 2~3년 동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크게 강화되었지만, 2019년 초 현재까지 북한의 시장에서 제재 효과라고 할 만한 현상은 별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주요 상품의 시장 물가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는 편이고 시장 환율 역시 안정적이다.²⁾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시장에 공급되는 각종 상품의 물량이 줄었다는 소식은 별로 들려오지 않고 있다.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에서 농수산물과 식품은 본래 북한산이 중국산보다 훨씬 많으며, 이들 품목의 생산과 공급은 제재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공산품은 중국산이 많지만, 2018년에도 대중국 소비재 수입은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가 2017년 연말에 일부 중요 상품(전기전자, 기계, 금속, 자동차)의 수입(즉, 대북수출)을 금지했지만, 이들 품목은 소비보다 투자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주민의 소비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시장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제재는 정제유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의 소량으로 제한한 것이다. 수입되는 정제유의 대부분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므로 수입이 크게 줄면 북한의 운수 사정이 나빠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운수 사정이 크게 나빠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밀무역을 통해 유엔안보리가 정한 한도보다 더 많은 정제유를 지금도 계속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역 감소로 물동량이 줄어 정제유 수요도 줄었으므로 내부 경제용 정제유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언론매체들은 2018년에도 시장활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2) 『데일리NK』, 「북한 시장 동향」 (<https://www.dailynk.com/北경마당-동향>, 2019. 2. 11. 검색); 『아시아프레스』,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http://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 2019. 2. 11. 검색).

보여주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합시장에서 자기 상품을 광고하는 표지판을 세워놓고 장사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고,³⁾ 개인식당들이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을 배달해 준다는⁴⁾ 등의 보도는 시장 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말 결산 시기에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고,⁵⁾ 주민들이 싸운 도시락의 질이 좋아졌으며,⁶⁾ 건강식품, 약초, 건강의료기 수요가 늘고 있다는⁷⁾ 등의 보도는 생활수준 향상 추세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식품경제와 개인서비스업

북한주민의 생활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경제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식품경제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각종 식재료와 식품의 생산, 수입, 가공, 운수, 판매와 관련된 제반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북한의 공식 식품경제는 집단농업과 국가수매 및 배급체도로 구성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개인농업, 개인유통업, 개인운수업, 개인음식업, 개인식품가공업 등이 발전해 식품경제에서도 시장과 사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⁸⁾

북한의 식품자급률은 매우 높고 대중국 식품 수입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북제재는 아직까지 식품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소식은 수출 길이 막힌 석탄 생산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가 활발해졌다는 것이다.⁹⁾ 이 지역은 수출을 못하게 된 석탄으로 난방을 쉽게 할 수 있어 비닐하우스 농사에 유리하며, 그동안 발달한 시장 유통망을 이용해 채소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제재로 인한 피해를 시장이 완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개인농업에는 대북제재보다 북한 당국의 정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개간해 농사를 짓고 있던 산간 지역 소토지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강조되고 있는 산림복구 정책 때문에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고, 해당 주민들은 협동농장 토지를 임차해 개인농사를 계속했다고 한다.¹⁰⁾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이 협동농장의 '비경지 토지' 임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경지로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¹¹⁾ 당국의 조치는 새로운 정책이라

3) 『자유아시아방송』, 「북 시장 매대에 광고 표지판 등장」, 2018. 10. 26.

4) 『자유아시아방송』, 「북 개인식당들, 음식배달 서비스 시작」, 2018. 8. 13.

5) 『데일리NK』, 「북한 연말결산 시즌 오니 돼지고기 가격이 된다」, 2018. 11. 7.

6) 『데일리NK』, 「퇴비전투에 들고 온 도시락 보면 주민 생활수준 알 수 있다」, 2019. 1. 28.

7) 『데일리NK』, 「북한 시장에서 약초, 영양제, 건강 의료기 수요 늘고 있다」, 2019. 1. 31.

8)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통일연구원, 2014, pp.127~138.

9) 『데일리NK』, 「대북제재가 바꾼 일상 ... 비닐하우스로 일군 채소, 전국에 표창 배송」, 2018. 5. 3.

10) 『데일리NK』, 「퇴기밭 빼앗긴 北 주민, 식량문제 해결 위해 고안한 방법은?」, 2018. 5. 28.

11) 『자유아시아방송』, 「북 당국, 협동농장 비경지 개인 임대 금지」, 2018. 4. 16.

기보다는 본래의 공식 제도를 준수하라는 것인데, 이를 얼마나 엄격히 실시할지는 미지수이다. 협동농장도 여러 방식으로 시장 및 사경제와 거래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경제활동의 중요 구성부분 중 하나인 개인서비스업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이 늘어나는 추세이고,¹²⁾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는¹³⁾ 등의 소식이 흥미로운데, 이런 현상도 역시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운수업과 통신업

시장 유통이 발전하려면 물자 및 여객 수송, 즉 운수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과거 북한에서는 철도 중심의 국영 운수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트럭,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한 사실상의 개인 운수업이 꽤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식적으로는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무역이 확대되어 물동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영 무역회사가 운영하는 운수업도 많이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연말에 유엔안보리가 추가한 대북제재는 운수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북한의 자동차 수입(대북한 자동차 수출)을 금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의 소량으로 제한한 것이다. 당장은 기존 자동차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정제유도 최소 필요 물량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겠지만, 운수업이 더 이상 발전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또한 제재로 수출 길이 거의 막힘에 따라 국영 무역회사 소속 화물운수업은 일감이 크게 줄었다.¹⁴⁾

다른 한편, 최근 국영 운수업이 시장경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예를 들면 평성시 국영 여객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내 무궤도전차의 경우, 비싼 요금을 받는 대신 전차 수와 운행 시간을 늘려 대중교통이 편리해졌다고 한다.¹⁵⁾ 또 신의주에서는 정규 노선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고,¹⁶⁾ 철도성은 개인사업자와 합작해 평양-신의주 구간에서 비싼 요금을 받는 '별이기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한다.¹⁷⁾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영경제 개혁 조치가 운수업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동전화 보급에 따라 크게 발전했던 통신업도 제재의 영향을 받게

12) 『데일리NK』, 「北 전역서 개인투자 한증당 성황 ... 주민들 즐겨 찾아」, 2018. 9. 3.

13) 『데일리NK』, 「北 교육열에 무허가 학원 '우후죽순' ... 당국도 손 못 쓴다」, 2018. 9. 25.

14) 『자유아시아방송』, 「북중무역 급감으로 북한 화물운수업체들 경영난」, 2018. 2. 28.

15) 『데일리NK』, 「北 당국, 무궤도 전차 통해 강사? ... 성인 1인당 이용료 1000원」, 2018. 2. 14.

16) 『자유아시아방송』, 「북한 신의주에 노선 시내버스 등장」, 2018. 5. 31.

17) 『데일리NK』, 「北 평양 신의주 '별이기차' 운행 ... 권력층 위한 고급열차?」, 2018. 8. 30.

되었다. 2017년 연말에 도입된 제재가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수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전화의 보급으로 정보 유통이 원활해지면서 북한의 시장과 사경제는 과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또 북한의 이동통신은 이집트 회사 오라스콤(Orascom)과의 합작을 통한 국영 통신업이어서, 북한 당국은 휴대폰 수입 판매 및 통화요금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정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휴대폰 수입 중단은 사경제와 국영경제 양쪽 모두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당장은 기존 보유 휴대폰과 통신설비를 이용하면 되지만 제재가 장기화되어 노후 기기를 대체하지 못하게 되면 통신 환경이 서서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4.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발달 정도는 시장과 사경제가 얼마나 발전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적 노동 통제가 풀려 자유롭게 남을 고용하거나 남에게 고용되어 일을 할 수 있어야 사경제활동의 규모와 수준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의 노동시장은 대체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북한주민들이 국영경제 바깥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노동 통제가 부분적으로 풀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은 일정 범위 내에서 통제를 풀어주고 있을 뿐이며, 사회주의적 노동제도의 기본 골격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즉, 북한주민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기업을 창설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사경제활동은 대부분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소규모 자영업에 불과하며,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다운 기업은 별로 출현하지 않고 있다.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상시 고용인 경우는 많지 않고 일시적, 임시적, 비공식적 고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국영경제 개혁 움직임에 따라 노동시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여주는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다.¹⁸⁾ 국영기업들이 남아도는 인력을 개인사업자에게 파견하고 있으며, 받은 노임의 일부는 공장 운영자금으로 쓰지만 대부분은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영기업 소속 노동자가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전에는 금지되는 일이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18) 『자유아시아방송』, 「북, 국영공장 노동력 개인사업자에 파견 허용」, 2018. 5. 23.

이런 조치가 실제로 공식적인 정책인지, 얼마나 널리 시행되는 일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자유롭게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영기업의 통제에 따라 고용하는 것이므로 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합법적으로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사경제활동의 수준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그 의미는 작지 않을 것이다.

국가적 건설사업의 노력 동원 시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보도도 흥미롭다.¹⁹⁾ 국가적 건설 사업에서도 이런 관행이 통용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노동 통제가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고 있고 사회주의 이념에 반하는 노동의 상품화 문화가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5. 주택시장

2018년 북한의 시장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하반기 들어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²⁰⁾ 주택가격 하락은 제재 효과를 드러내는 신호탄 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택은 본래 국가가 건설해 배정해 주는 국유주택이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일부 주택이 매매 대상이 되거나 신규 주택을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시장화 현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 시장화는 아직은 주변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 짓는 좋은 주택, 특히 평양 등 대도시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판매하는 사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작지 않다. 이런 사업은 국가기관, 국영기업이 개인사업자와 결탁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국영경제와 사경제가 뒤섞이는 최근 북한식 시장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평양 등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왜 떨어졌을까? 정확히 알긴 어려우나 제재로 인해 외화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규 아파트를 비롯한 고급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은 외화벌이 및 이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신흥 부유층 및 권력층이고, 고급 주택 매매는 외화로 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여러 해 동안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의 아파트를 비롯해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된 것도 가격 하락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 『데일리NK』, 「국가건설 현장에 돈 받은 인부들이 가득 ... 북한서 무슨 일이?」, 2018. 12. 5.

20) 『동아일보』, 「외환위기 터진 평양, 반값 폭락한 집값」, 2019. 1. 30; 『데일리NK』, 「서울과 반대로 가는 평양... 중심구역 아파트 가격 급락」, 2018. 9. 17; 『데일리NK』, 「북한 아파트 가격 폭락에 거래 실종, 부동산 마비상태 위기감」, 2018. 10. 8; 『데일리NK』, 「부동산 가격 폭락에도 평양 아파트 건설 활발」, 2018. 10. 26.

지난 10여 년 이상 북한의 신규 주택가격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고, 따라서 주택 건설이 고수의 사업이 되어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은 거꾸로 건설사업의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분간은 건설 중인 주택을 완성시키기 위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 기존 사업이 완료되고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신규 사업은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단, 북한과 미국 간 핵협상이 잘 진행되어 제재가 풀릴 희망이 보이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III. 시장 및 사경제 관련 정책 동향

1. 시장 통제 정책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당국은 시장과 사경제의 발전을 대체로 묵인, 허용, 활용하는 정책을 펴왔으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시장에 대해 더욱 유희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을 고수하고 있고, 시장과 사경제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과 사경제의 발전이 체제의 기본 틀을 허물지는 못하도록 사회적 통제와 이념적 선전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검열과 단속이 대표적인데, 북한 전문 매체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런 조치는 2018년에도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²¹⁾ 시장과 사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와 단속은 중하급 관리들이 뇌물을 챙기는 수단이기도 하다. 시장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도 있는데, 이는 시장활동 그 자체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농번기 농촌 노력 동원이나 각종 사회적 노력 동원을 위해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한다.²²⁾

각종 통제와 단속이 아주 강하게 실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활동이 계속 진행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재가 장기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시장 통제를 크게 완화해 시장과 사경제가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는 제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지

21) 『데일리NK』, 「北 주민들, 비사회주의의 검열에 “폭동 일어날 것” 불만 고조」, 2018. 4. 19; 『데일리NK』, 「비사회주의의 그루뵤, 北 전역서 자본주의품 대대적 단속」, 2018. 5. 4.
22) 『자유아시아방송』, 「북, 주민통제 수단으로 장마당 이용시간 제한」, 2018. 8. 4; 『자유아시아방송』, 「북, 장마당 개장시간 대폭 축소」, 2018. 9. 21; 『자유아시아방송』, 「북, 장마당 이용시간 4시간으로 확대」, 2018. 10. 27.

않았고 제반 경제정책도 별 변화가 없는데, 북한 당국이 향후 상황 변화에 대응해 더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국영경제와 개인사업

시장과 사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최근 정책에서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 온 국영경제 개혁이다. 국영경제 개혁의 기본 내용은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에 경영 자율권과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국영경제가 시장 거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경제와 더 많은 연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있다.²³⁾

2018년에 북한 전문 매체들이 전한 여러 소식은 이런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의주화장품공장은 화장품을 시장에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노동자들에게 대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었고,²⁴⁾ 순천시멘트공장은 개인 '돈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생산된 시멘트를 시장에 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²⁵⁾

다른 한편, 개인이 투자해 만든 기업소나 상점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 비해, 국영공장들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도 있다.²⁶⁾ 기업마다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체계적 조사 없이는 국영경제 개혁의 성과가 어떠한지 확인하기 어렵다. 일부 국영공장의 어려움은 제재 이후 일부 상품의 수입이 중단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제재가 장기화되어 상품 수입이 더 줄게 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국영기업 간에, 또는 국영기업과 개인기업 간에 경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다. 예를 들면 원산의 식료품공장들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평양에서 만든 식품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²⁷⁾ 신의주화장품공장의 화장품이 인기를 끌자 개인 장사꾼들이 유사 화장품을 값싸게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²⁸⁾ 시장경제의 활력은 기업 간 경쟁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므로 경쟁의 출현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상점이나 식당 같은 서비스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개인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다.²⁹⁾ 북한의 사경제는 아직 제조업에서는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23)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8.

24) 『자유아시아방송』, 「북 신의주화장품공장, 생산품 판매수익으로 배급 정상화」, 2018. 4. 20.

25) 『자유아시아방송』, 「북, 공장 기업소 자율 경영체계 적극 장려」, 2018. 5. 18.

26) 『데일리NK』, 「김일성 다녀간 공장도 문 닫았는데... 개인투자 공장은 '활기」, 2019. 1. 30; 『자유아시아방송』, 「북한 라면, 북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해」, 2018. 5. 7.

27) 『자유아시아방송』, 「평양과 지방 식품공장 품질경쟁 벌어」, 2018. 9. 5.

28) 『자유아시아방송』, 「북 여성들에 짝들 '평양기' 화장품 인기」, 2018. 7. 4.

29) 『데일리NK』, 「北 개인기업소 운영 활발... "평양년 월 100 달러 월급 주기도"」, 2018. 9. 12; 『데일리NK』, 「청진 개인기업소 운영 활발... "5톤 선박도 직접 건조"」, 2019. 1. 21.

한계가 있는데, 최근의 국영경제 개혁 움직임은 제조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사기업이 국영기업으로 위장하거나 또는 국영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까지 전해진 북한 내부 소식들을 보면 사기업의 발전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혁이 얼마나 더 진전되어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IV. 맺음말

지난 몇 년 동안 UN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실시되어 왔지만, 북한의 시장과 사경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발전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는 주로 국영경제를 겨냥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시장과 사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 외에는 제재 효과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외화보유액을 사용해 상당한 수준의 상품 수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재가 장기화되어 외화보유액이 소진되어 가고 상품수입이 더 줄어들면 시장과 사경제 활동도 위축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 생활수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국영경제 참가자 중 일부가 사경제 부문으로 이동해 제재 피해를 상쇄하는 완충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피해를 충분히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핵 협상을 빨리 타결해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려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영경제 개혁은 시장과 사경제를 다소간 활성화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영경제 개혁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국영경제의 시장거래 참여, 국영경제와 사경제 간 연계 형성을 부분적으로 합법화,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널리 시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결국 북한 시장과 사경제의 미래는 핵문제 해결과 이에 따른 대외관계 개선, 그리고 국내 경제제도 개혁이라는 양대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양대 요인 각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열린 문제로 남아 있다.